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한 극복요인 연구

최정원*, 김보기**
가람경희한의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A Study on the Overcome Factors through Status Analysi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ppearing in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Jung-Won Choi*, Bo-Ki Kim**
Director, Karam Kyunghee Oriental Medical Clinic*
Professor,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발전추세에 따라 향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극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복요인으로는, 첫째, 전달체계의 속성에 대한 극복이다. 둘째,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이다. 셋째,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이다. 넷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극복요인이 해결될 때 비로소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극복요인, 조직운영

Abstract This study recognized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will b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developing trend of social welfare that and intended to find overcome factors by analyzing actual status of operating organization.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characteristics of delivery system, ineffectiveness of task, delivery system and inconcinnity of personnel are the overcome factors of social welfare. Consequently, this study revealed that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will go on smoothly at last when the problems of the overcome factors get solved.

Key Words :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vercome Factors, Organization Operation

1. 서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직구조 방안을 설계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용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누가’ 직접 제공하는가 하는 공급 주체의 문제로서 여기서 ‘누구’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인 공·사 단체와 조직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공·사적 기관과 소비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Received 5 January 2016, Revised 12 January 2016
Accepted 18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Bo-Ki Kim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skk33333@naver.com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전달체계는 주로 사회복지 법령에 근거해서 소속 공무원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 또는 보조하거나 정부의 복지기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다. 공적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적 전달체계는 그 업무가 공익성을 강하게 띠므로 그 조직운영 상에 있어서 효과적인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전달체계상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극복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극복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해

전달체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영환(2013)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유효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 및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사회복지의 목적 및 정책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기적 관계로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1].

손병덕(2012)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급여 혹은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공급자와 대상 간 연계조직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한다[2].

심영미(2011)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고객 또는 이용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3].

박경일(2011)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전달체계는 다양한 급여 혹은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통하여 실천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4].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전달을 위한 조직체계이므로 사회복지공급기관과 이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공급자간 혹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 및 인력구조를 의미한다.

2.2 전달체계의 구분

전달체계의 구분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즉 공급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및 기능적 분야에 따라 전달체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에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세부적인 구분을 시도하고, 민간전달체계는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이에 포함된다.

김수신(2014)은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을 기준으로 직접행정, 또는 관치행정과 간접행정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간접행정은 다시 위임행정과 자치행정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관치행정과 위임행정(단체위임행정과 기관위임행정), 그리고 자치행정 등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직접행정 또는 관치행정이란 지방에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일선 기관을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둘째, 간접행정이란 지방에 국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담당·수행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에는 위임행정과 자치행정의 두 가지가 있다. 위임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게서 사무를 위임받아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 아래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위임행정에도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하는 단체위임행정과,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기관위임행정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치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5].

정부 간 관계의 유형을 살펴보면, 라이트(Wright)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 및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 간 관계를 분리형(separated type), 내포형(inclusive type) 그리고 중복형(overlapping type)으로 나누고 있다(김수신, 2014, 재인용). 분리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경계를 이루어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는 2원적인 관계를 말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리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함부로 축소되거나 또는 침해될 수 없다. 내포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상호간에 계층제적 상하관계에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주정부는 연방정부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형이다. 중복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는 상호의존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적기능의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각급 정부가 상호의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모형이다.

엘코크(Elcock)는 영국의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지위와 관련된 세 가지 이념형, 즉 대리자 모형, 동반자 모형, 교환과정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수신, 2014, 재인용)[5]. 대리자 모형은 지방정부에 대해 이를 중앙정부의 대리자로서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 능률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대리자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권력적으로 완전히 지배 및 통제하는 형태이다. 동반자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동반자로서 국민에게 하는 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개략적인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 해석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형이다. 즉 동반자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에 대등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형태이다. 교환과정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각기 가진 자원을 교환하여 권력의 균형을 찾는 관계이다.

2.3 전달체계의 운영대상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운영하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양승일(2014)은 이는 주체별 유형(type classified by subject)으로 부른다[6]. 즉 주체별 유형은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시설·기업복지재단 등 민간전달체계, 이들의 혼합적 성격인 공적·민간전달체계 등이 해당되며,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종속형, 대등형, 동반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종속형(dependent type)은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광역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고, 이를 다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초정부가 광역정부에 종속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자치권이 위축된 형태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종속형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회복지급여가 광역정부를 경유하여 기초정부에 전달되며, 이를 다시 기초정부는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경로를 갖게 된다. 한국의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등형(equal type)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광역정부의 자치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만 기초정부는 광역정부에 종속되는 관계로 자치권의 제한을 받는 유형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대등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상호간에 독자적으로 이용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반형(partnership type)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서, 이 유형에서는 광역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정부에도 자치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협력적 관계를 갖게 된다. 즉, 정부 간 관계만으로 볼 때는 이 유형이 가장 이상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상호간에 독자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파트너로서 협의관계도 유지한다. 따라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공백의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복급여도 최소화되는 것이다(양승일, 2014)[6]. 따라서 주체별 유형에서 중앙정부는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에 라이트의 내포형, 엘코크의 대리자모형 등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라이트의 중복형, 엘코크의 동반자모형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중앙정부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가지지 않고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기획·집행·전달을

해오다가, 2007년부터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전달 체계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의 운영책임 및 역할의 중요성이 기초지방정부 > 중앙정부 > 광역지방정부 순으로 업무흐름이 이루어지게 된다.

2.4 선행연구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춘광(2002)은 그의 논문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 결과,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다양한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은 전달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사회복지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7].

심영미(2011)은 그의 논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평가”에서, 경기북부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연구하였다. 이 연구 논문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목표에 대해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들의 만족에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분석 결과, 노인의 서비스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적절성, 책임성과 공무원의 업무만족도로 나타났다[3].

이대영 외(2013)는 그들의 논문 “한국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적 방향 모색”에서, 향후 한국의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선할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분석 결과,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정책 및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위상, 권한, 역할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8].

선수경(2012)은 그의 논문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찾아서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질 또는 생산성에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 결과, ①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소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②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소진 수준은 높다.

③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소진 수준은 낮다. ④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은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⑤ 전달체계,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소진에 대한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9].

이지영(2013)은 그의 논문 “정부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 및 서비스만족도, 성공적 노화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 노인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 일자리사업 만족도, 일자리참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 간 영향관계는 도시 및 농촌지역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김이배(2014)는 그의 논문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한계”에서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시도들의 내용을 탐색하며, 전반적 특성과 한계를 검토하기 위해 분석틀을 구성하여 기존의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내용 및 개편 과정에 주목하여 다루었다. 이 분석 결과, 문제규정→목적과 목표설정→대안제시→실행전달체계→피드백 과정 모두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 외에도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혜승(2012)의 논문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특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김이배(2014)의 논문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한계” 등이 있다[12,11].

3.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극복요인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나타난 조직운영상의 실태 분석을 통한 극복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3.1 전달체계의 속성에 대한 극복요인

하춘광(2002)은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속성을 분석한 결과, 그 극복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7].

첫째, 통합성에 대한 극복이다. 통합성이란 관련조직들 간의 의사전달 통로가 확립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사회복지 욕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른 극복요인으로는, ①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다층구조를 이루어 당초의 정책적 의도가 잘

전달이 되지 않거나 또는 조직 간에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집행조직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② 집행조직인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업무과약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으므로써 서비스 전달의 있어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③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적절성에 대한 극복이다. 적절성이란 관련공무원의 업무 적합도를 말한다. 적절성에 대한 극복요인으로는, ① 공적사회복지 정책결정은 형성과정에서부터 실천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② 정치적 고려에 따른 복지정책 결정으로 관련 공무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의욕을 감소되고 있다. ③ 정책결정 및 전달과정이 매우 수직적이면서 일방적이므로 집행조직 공무원 각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셋째, 접근성에 대한 극복이다. 접근성이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문제점이 용이한가 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극복요인으로는, ① 일반 행정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복지행정공무원들이 대상자와 자주 접할 수 없다. ② 대상자가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도 대부분의 복지조직이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③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공적사회복지수급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넷째, 전문성에 대한 극복이다. 조직의 전문성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성이 없는 조직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극복요인으로는, ① 보건복지부는 복지와 관련한 최상위 조직이나 일반 행정공무원들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그 조직을 전문조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전문행정의 구조는 권위 및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관료주의적 질서가 아닌 전문성의 수준에 의해 유지되고 전문가의 개별적 전문성과 깊이에 따라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상에 나타난 속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2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요인

이영환(2013)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의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복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1].

첫째, 업무분장의 비효율성의 극복이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수행조직은 3가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지자체 복지조직을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 둘째, 지자체 소속의 전담 수행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셋째, 중앙정부 소속의 전담 수행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한 수행조직의 개편과 관련해서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 한국 현실에의 적합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업무분장에 대한 개선종합대책으로,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는 읍·면·동에서, 소득·자산 조사,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지급결정은 시·군·구, 전달은 시·군·구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었다. 이는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한 후 생활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군·구의 사례조사팀을 통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수행 내용 간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급여부 결정 및 사후관리 과정에 있어서 공적자료만으로는 대상자의 생활여건에 대해 완전한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조사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공식적 업무분장과 실제업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하여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주민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무분장에 대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례관리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의 극복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사례관리 전담조직을 상설화함으로써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활유도하고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전문적 사례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가 사례관리의 시행주체로서 사회복지사가 관료적 업무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적합한 사례관리의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 주도 아래 사례관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사례관리 추진 체계의 분석 및 현황 파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행 행정기관의 적절성,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전문직과의 업무협조, 사회복지전문직 배치에 있어서의 효율성 등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구체적 사업추진 방향의 논의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과 민간의 연계성 부족에 대한 극복이다. 2003년 도입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장, 생활시설 시설장, 주민조직 대표, 시·군·구 담당공무원, 보건소 소장, 사회복지전문가, 복지서비스 수요자 조직 대표, 관련단체 대표, 실무협의체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서비스 전달 담당 기관들의 수평적 협력연결망을 통하여 서비스의 단절성 및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민간자원을 복지 정책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및 민간 협력강화가 우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간 협력강화의 구심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조직구조의 문제해결을 위해 인력확충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활성화 방안까지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확충 부분에 있어서도 방향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적 자체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역할 파악과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종합대책 시행 이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간 협력강화의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3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

정홍원 외(2012)은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극복요인으로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전달체계의 부조화, 복지정책의 집행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성, 복지업무분야의 담당인력의 부족 및 복지전달체계의 집행 역량 부족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13].

첫째,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전달체계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많은 극복요인들이 발생하고 있고, 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다

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전달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극복요인은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전달체계 사이의 부조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복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 제도의 확대와 관련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그에 따른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에 인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 복지업무의 복잡성 및 난이도가 상당한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정형화된 업무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지역주민이 가진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비정형화된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지원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 등의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 제도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보육지원 대상자의 선정으로 인하여 대표적으로 업무의 양적 증가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춘 지역서비스정책 및 자체 사업의 개발을 위한 기획업무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추가된 자활업무 및 고용지원서비스, 바우처(voucher) 방식의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취약계층 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한 통합사례관리,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자원의 발굴과 연계,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매우 다양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제도가 급격히 확대된 반면,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는 지체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기존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수행되면서, 제도 및 전달체계 간의 부조화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체계 및 전달체계는 사후적 성격의 현금급여 중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경우에 취약계층의 개별적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이용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외에 달리 대응 없이 기다리다가 이용자 선정 요건에 충족되면 이용자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제도와 전달체계의 부조화 현상은 복지급여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저하로 연결된다. 복지제도 및 정책의 확대,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에 비하여 급여이용자와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복지급여

에 대한 중복 수혜 또는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복지정책의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성에 대한 극복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 담당기관과 지역단위 집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개별 사회복지사업 간 중복이 빈번하며, 이로 인하여 정책집행의 효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16개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복지정책의 총괄 및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기획과 집행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범주화된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집행기관에 업무 부담으로 집중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기관의 담당부서에 따른 개별 복지제도 및 사업은 별도로 수급대상자의 선정 기준, 정책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 집행방법과 보고체계를 갖는다. 이러한 사업들의 업무 부담이 시·군·구 및 읍·면·동에 속하는 소수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물리적으로 업무수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의 복지서비스기관은 개별적 사업지침에 의해 고립적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복지제도 사이의 수평적 연계를 고려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획일화된 업무 수행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업무의 본질적 속성인 개별화, 연계·통합적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달성,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급여 이용자의 복지욕구 충족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분산성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능은 극대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이 최소화되는 중앙집권적 구조 아래에서 중앙정부에 상당하는 수준의 업무 분산성은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투영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 업무의 기관별, 부서별 분산성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역단위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다양한 종류의 복지서비스와 복지자원 사이의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민간영역에서의 복지급

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또한 공급자 중심의 분산적 운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간 유기적으로 업무연계가 어려우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 정보의 부족과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획일적인 전달체계와 사업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의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에 있어서의 기반 확립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에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사업지침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계속해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셋째, 복지업무 담당인력의 부족에 대한 극복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논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극복요인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관한 문제이다. 인력문제는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그리고 인력구성 등에 있어서 그 논의가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업무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담당 인력의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책집행 및 일선 기관에 있어서 복지담당 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 확충 없는 조직개편과 인력 이동의 변화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조사, 급여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연계 업무의 세분화 등으로 인해 업무가 증가하여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력 부족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직무스트레스, 소진, 사회복지직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며, 이는 다시 담당 인력의 직무만족도 및 사기 저하로 연계되고 있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제공과 다양화된 개인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으로는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관건이다. 특히 복지제도의 현물급여 및 인적서비스의 효과성에서 정책대상자의 개별화된 욕구의 사정 및 급여대상자의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 서비스 제공에 의하여 결정되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초기상담, 욕구사정, 사례관리 등과 같은 업무는 전문성 보유 인력이 이를 담당해야 하나, 전문성 보유 인력의 충원을 하기보다 기존의 인력 재배치 통하여 임시 해결책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일

선 기관에서 사회복지직과 전환배치직 간에 업무 부담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복지담당 조직의 중간 관리자들은 대체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업무분담에 대한 불합리성이 커지고 전문적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복지전달체계의 집행 역량 부족에 대한 극복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행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제도의 집행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가구에서 극단적 선택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담당 일선 기관에서 이를 포착하거나 예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질병, 생활고 등 절망적 상황에서 공적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에 앞서서 공적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복지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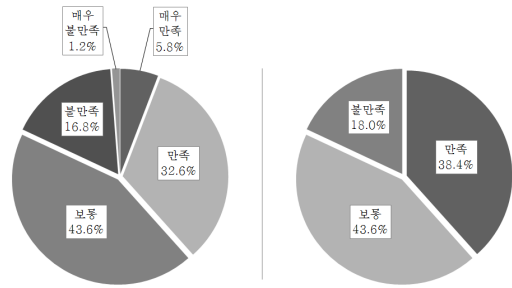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극복요인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제도의 대응 노력은 정책의 효과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복지정책의 집행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다.

3.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

감사원(2013)에 따르면, 2013년 감사원은 각 부처 복지사업의 이용자 선정·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의 충원·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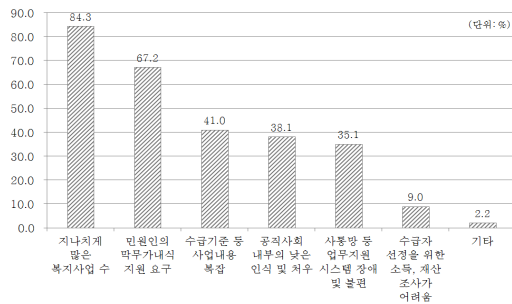
감사원은 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복지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 원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지급여 이용자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1]에서 보듯이, 감사원 감사결과 복지만족도는 만족의 경우 38.4%로 1/3 수준이며, 불만족의 경우에도 18.0%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2013, 재구성)[14].



[Fig. 1] Survey Results of Current Welfare Satisfaction

[Fig. 2]에서 보듯이 복지업무 불만족 사유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복지사업 수가 84.3%인 것으로 보아 복지사업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감사원, 2013, 재구성)[14].



[Fig. 2] Survey Results of the Reasons of Welfare Task Dissatisfaction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극복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자료관리 및 기능 부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부적정이다. 복지사업은 각종 급여의 지원대상이 되는 개인·가구 등 '주체', 해당주체가 소득·재산 등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자격', 그 자격에 따라 해당 주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위 3개 영역이 시스템 내에서 오류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려면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주체·자격·서비스에 있어서 오류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검증 기능이 구축되고 이러한 오류검증 기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일

관성 있게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 시스템에 요구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하기 위한 업무분석 전달인력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배치하며,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스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향은 <Table 1>과 같다(감사원(2013: 18) 재구성).

<Table 1> Direction of Building and Operating Information System Reflected the Features of Social Welfare Service

사회복지사업의 특징	시스템 구축 운영 방향
모든 복지사업 전달체계는 주체(개인, 가구), 자격, 서비스로 연결	- 주체, 자격, 서비스 영역의 오류 검증 기능 필수 - 주체, 자격, 서비스 영역의 개념 정립과 일관성 확보
복잡·다양한 급여기준을 정보시스템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이 결정	- 복잡·다양한 급여기준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정보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업무 분석 전달 조직·인력 필수
무상보육 등 복지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	-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실시간 자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또 다른 하나는 시스템 성능 장애 및 위험에 대한 미온적 대처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데이터양도 같이 증가하는 등 시스템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현황은 <Table 2>와 같다(감사원, 2013, 재구성)[14].

<Table 2> Status of User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구분	(Unit: N)			
	2010	2011	2012	2013. 5
가입자	38,665	42,282	59,837	56,302
접속자	33,906	37,618	52,862	49,869

더구나 실시간 데이터 과다, 인덱스 최적화 미흡 등으로 시스템 성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2013년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교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 대행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시스템 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양 변동 추이는 <Table 3>과 같다(감사원, 2013, 재구성)[14].

<Table 3> Changes of the Data Volume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구분	테이블 수	데이터 건수	데이터양
2010. 4	1,217개	85.6억 건	-
2011. 12	1,481개	-	16.4 TB
2012. 8	2,154개	-	16.7 TB
2013. 6	2,530개	321.5억 건	20.2 TB

둘째, 사회복지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과중이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구조 개선분(행정직 재배치 및 자연감소 대체)의 목표인원을 확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원인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2년도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구조 개선분 50% 이상 미이행 행정기관(시·군·구) 명세”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27개 시·군·구 2012년 행정직 재배치 목표인원 85명 모두를 충원하지 아니하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22개 시·군·구는 자연감소 대체 목표인원 26명 모두를 충원하지 못하는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인력충원을 위해 다른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계획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행정직 재배치 등과 같은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함으로써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도 개선하지 못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은 <Table 4>와 같다(감사원(2013: 92) 재구성).

<Table 4> Status of Social Welfare Public Officer (Unit: N, Trillion Won)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무원 수	22,748	20,583	21,608	22,338	23,245	25,400
복지재정	80.2	92.5	109.6	110.0	116.8	123.5
복지사업 수	88	93	100	106	126	128
복지대상자수	4,820,000	8,353,000	9,939,000	11,398,000	11,655,000	12,499,000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	211.8	405.8	459.9	510.2	501.3	492.1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부적정에 대한 극복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인 임원의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불법행위 혹은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면 해당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 회계 또는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부적정,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 부적정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은 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정 수준 유지와 동시에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전달을 위한 조직체계이므로 사회복지공급기관과 이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공급자 간 혹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 및 인력구조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적 부문은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발전추세에 따라 향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직운영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극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복요인으로는, 첫째, 전달체계의 속성에 대한 극복이다. 즉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속성인 통합성, 적절성, 접근성, 전문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역할 파악과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종합대책 시행 이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강화의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이다. 즉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체도의 대응 노력은 정책의 효과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복지정책의 집행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은 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정 수준 유지와 동시에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극복요인이 해결될 때 비로소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1] Young-Hwan Lee, "A Study on Law and Policy for Efficiency Enhancement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3-02, 2013.
- [2] Byung-Duk Son, "Social Welfare Policy", Hakjisa, 2012.
- [3] Young-Mi Sim,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1.
- [4] Kyung-II Park, "Social Welfare Policy", Knowledge Community, 2011.
- [5] Soo-Shin Kim,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2014.
- [6] Seung-II Yang,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Yangseowon, 2014.
- [7] Chun-Kwang Ha,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 In the Aspect of the Supplier",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2.
- [8] Dae-Young Lee·Kee-Jo Choi, "A Study on the Activating Plans of Korea's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13, pp.235-258, 2013.
- [9] Soo-kyung Sun, "A Study on the Factor about Effects of Public Social Worker on their Burnout",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2.
- [10] Ji-Young Lee,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Elderly Employment Service

- Delivery System on Successful Aging: Comparis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3.
- [11] Lee-Bae Kim,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in the Reform of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42, pp.44-91, 2014.
- [12] Hye-Seung Lee, “A Study on the Traits and Effective Operation of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12(4), pp.619-638, 2012.
- [13] Hong-Won Jung·Young-Bum Lee, “Restructure of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 [14]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 Audit Report: Operation Condition of Welfare Delivery System”, 2013.

최 정 원(Choi, Jung Won)



- 1989년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2016년 ~ 현재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사회복지전공 재학
- 1993년 ~ 현재 : 가람경희한의의원장(한의학 박사, Ph.D)
- 2016년 ~ 현재 : 한국사회복지실천정책학회 책임연구위원

- 관심분야 : 한의학복지행정, 의료복지, 노인복지
- E-Mail : gardenwo@naver.com

김 보 기(Kim, Bo Ki)



- 1980년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07년 :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과 박사(Ph.D)
- 2013년 : 서울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Ph.D)
- 2013 ~ 2015년 : KICU 교수, 대학원장

- 2014 ~ 현재 : 한국사회복지실천정책학회 회장
- 2015 ~ 현재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기독교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
- E-Mail : skk33333@naver.com